

# BOK 이슈노트

## 지역간 인구이동과 세대간 경제력 대물림

한국은행  
한국은행  
한국은행

정민수  
한국은행 조사국 지역경제조사팀장  
Tel. 02-759-4156  
cmins@bok.or.kr

이다혜  
한국은행 경기본부 경제조사팀 과장  
(前 지역경제조사팀 소속)  
Tel. 031-250-0082  
dh.lee@bok.or.kr

Volker Ziemann  
Economist, Korea/  
Sweden desk, Economics  
Department, OECD volker.  
ziemann@oecd.org

2026년 2월 11일

- ① ‘개천에서 용 난다’는 속담은 과거 우리나라의 고도성장기에 빈번하던, 자식 세대의 지위가 부모보다 월등히 나아지는 극적인 계층이동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세대간 계층이동의 역동성이 이전에 비해 약화되고 있다는 경고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더해 최근 확대되고 있는 **지역간 격차는 거주지역의 대물림과 맞물려 세대간 경제력의 대물림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인구의 절반가량이 출생지역을 벗어나지 않는 것을 고려하면 지역별 부익부 빈익빈이 개인에게 그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소득이 높은 지역으로 이주해 계층 상승을 이루려 해도, 상당한 비용 탓에 그러한 기회조차 부모의 경제력이 뒷받침된 자녀들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 ② 본고는 우리나라에서 세대간 경제력 대물림의 양상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보고, 거주지역 이동(이주)이 그 대물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세대간 경제력 대물림은 최근 강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대물림 정도를 측정하는 데 널리 활용되는 소득백분위 기울기(RRS: rank–rank slope)가 0.25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부모의 소득순위가 100명중 10위 상승하면 자녀의 소득순위는 2.5위 상승**한다는 의미이다(따라서 RRS가 1에 가까울수록 대물림이 심함). 자산을 기준으로 한 자산백분위 기울기는 그보다 큰 0.38로, 소득에 비해 **자산의 대물림이 더 강하게** 관찰되었다. 그리고 세대별로 구분하면 소득과 자산 모두 **최근 세대에서 대물림 정도가 심해지는 양상**이 확인되었다(70년대생 자녀의 소득RRS 0.11, 자산RRS 0.28 → 80년대생 0.32, 0.42). 이는 계층이동 사다리가 약화되고 있다는 사회적 인식과도 궤를 같이한다.
- ③ 일반적으로 **자녀가 부모 품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경우** 교육환경, 직장 등 경제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함께 변화하므로 **경제력이 개선**되고 나아가 세대 간 대물림을 완화하는 경향이 있다. 미시자료 분석 결과 이주한 자녀의 평균 소득백분위는 부모보다 6.5%p 상승한 반면 비이주 자녀는 오히려 2.6%p 하락하였다. 또한 이주 자녀 집단의 소득 및 자산 RRS(0.13, 0.26)는 비이주 집단(0.33, 0.46)보다 현저히 낮아 이주 집단에서 세대간 대물림이 덜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본 자료의 내용은 한국은행의 공식견해가 아니라 집필자 개인의 견해라는 점을 밝힙니다.  
따라서 본 자료의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할 경우에는 집필자명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논고 작성에 큰 도움을 주신 이지호 조사국장, 권성택 지역경제부장, 김형석 국제경제부장께 감사드리며 남아있는 오류는 저자의 책임임을 밝힙니다.



한국은행

- ④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은 이주로 인한 자녀 세대의 소득계층 상승효과, 즉 이주효과가 출생지와 이주지에 따라 크게 다르다는 점이다. 먼저 수도권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수도권 권역 내에서 이주했을 때, 특히 저소득층 자녀를 중심으로 계층 상향이동이 이뤄지고 있었다. 반면 비수도권 출생 자녀들은 수도권으로 이주할 경우에는 경제력 개선폭이 커졌지만, 광역권역 내부에서 시·도간 이주시에는 그 효과가 과거에 비해 크게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과거 세대(현재 50대)는 비수도권에서 태어나 거점도시 대학을 졸업한 집단과 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한 집단의 평균 소득백분위가 각각 61.7%, 62.3%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반면 최근에는(현재 30대) 수도권 대학 졸업 집단의 평균 소득(61.8%)이 지역 거점도시 대학 졸업 집단(53.3%)을 크게 상회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거점도시 대학의 경쟁력 약화와 더불어, 비수도권 전반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구조적 여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 ⑤ 비수도권에서 광역권을 벗어나지 않는 이주가 경제력 향상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하는 점은 특히 저소득층 자녀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저소득층은 주거비 부담 때문에 서울·수도권으로 이주를 포기하고 인근 거점도시 등 권역 내 이동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모자산이 하위25%에 속한 자녀는 상위25% 자녀보다 수도권 이주 확률이 43%p나 낮았다. 이러한 기회의 불평등은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대물림 심화에 기여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함께 비수도권에서 태어나 고향에 남은 자녀들은 '기난의 대물림'을 겪고 있다. 그들 중 부모소득이 하위50%인 자녀의 소득이 여전히 하위50%에 머무는 비율은 과거(71~85년생) 50% 후반에서 최근(86~90년생) 80%를 넘어섰다. 반대로 소득 상위25%로의 진입 비율은 13%에서 4%로 하락하였다.
- ⑥ 따라서 개인 입장에서 비수도권 출생 자녀는 수도권으로 이주할 유인이, 수도권 출생 자녀는 수도권 내 잔류할 유인이 매우 크다. 이는 그간 청년층의 일방적인 수도권 집중이라는 결과로 이어져 왔다. 그러나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이 국가 전체로는 지역간 양극화와 사회통합 저해, 나아가 초저출산에 이르기까지 큰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 ⑦ 출생 및 거주지역과 맞물려 경제력 대물림이 심화되는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용이 될 재목이 강으로' 가는 것을 돋는 이동성 강화 정책과 더불어, 보다 근본적으로는 지역의 '작은 개천을 큰 강으로 탈바꿈'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교육시스템과 공공투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먼저 비수도권 저소득층 학생의 이동성 강화를 위해 '지역별 비례선 발제' 등을 통해 서울 상위권 대학으로의 진학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비수도권 거점대학의 교육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소수의 거점대학이 특정 분야에서라도 서울 상위권 대학에 준하는 경쟁력을 갖추도록 '선택과 집중'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향후 인구 감소와 재정여력 축소를 감안하면 비수도권의 산업기반 및 일자리를 개선하기 위해 우선은 거점도시에 대한 집중 투자가 긴요하다. 거점도시 중심의 지역 성장은 비수도권 내에서 지역간 이동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세대간 대물림을 완화하는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행정구역 통합 및 광역권 거버넌스 개편도 거점도시의 위상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 I. 연구배경 및 요약

1. 우리 사회가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기회의 평등(equality of opportunities)과 능력주의의 (meritocracy)는 필수적인 가치이다(Ferreira & Brunori 2024). 능력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부모의 자원과 경제력이 자녀에게 그대로 이어지는 세대간 대물림을 가능한 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고도성장기에는 ‘개천에서 용 난다’는 격언이 현실화되는 사례를 흔하게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경제구조의 성숙과 함께 그간 부모 세대에서 누적된 경제력 격차가 자녀 교육투자 등의 격차로 재생산되면서 세대간 계층이동의 문이 더욱 좁아지고 있다. 실제 우리 국민들 중 본인과 자녀의 계층이동 가능성성이 낮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는 상황이다 (국가데이터처 2025).
2. 세대간 경제력의 대물림은 최근 확대되고 있는 지역간 경제력 격차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는 많은 경우 거주지역도 세대를 이어 대물림되기 때문이다<sup>1)</sup>. 즉 소득과 자산이 높은 지역에서 태어난 자녀는 부모와 마찬가지로 높은 경제력을 가질 가능성이 큰 반면, 그렇지 않은 지역의 자녀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는 이상 낮은 경제력을 대물림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3. 이에 따라 본고는 첫째, 우리나라의 세대간 경제력 대물림 정도와 그 변화를 미시자료를 기반으로 측정하고 둘째, 거주지역과 이주 여부에 따른 격차 확대가 세대간 대물림의 심화와 어떻게 연관되는지 분석하였다.
4. 먼저 세대간 대물림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기존 연구에서 널리 활용되는 세대간 소득백분위 기울기(RRS: rank–rank slope)를 추정하였다. 여기서 소득백분위란 비슷한 연령끼리 소득이 높은 순서대로 줄 세우고 그 순위를 100% 기준 퍼센타일(percentile)로 표시한 값이다. 그래서 소득백분위 기울기(소득 RRS)는 부모의 소득 순위가 100명중 1위 상승했을 때, 자녀의 소득 순위가 몇 위나 상승하는지를 나타낸다<sup>2)</sup>.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소득 RRS는 0.25로 추정되었는데, 출생 코호트별로 나눠보면 최근 세대에서 소득수준의 대물림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70년대생 자녀 0.11 → 80년대생 자녀 0.32). 자산을 기준으로 측정한 자산 RRS는 0.38로, 소득 RRS(0.25)보다 높아 자산의 대물림이 더 강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자산 RRS 또한 최근 상승하여 세대간 자산계층의 이동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70년대생 0.28 → 80년대생 0.42).

1) 우리나라 성인 인구의 절반이란 자신이 태어난 시·도에서 계속 머물며, 70% 정도는 출생한 광역권역을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한국 노동파일).

2) 소득백분위 기울기가 1이면 부모와 자녀 간 소득순위가 일치하여 완전한 소득 대물림을 뜻하며, 1보다 작을수록 대물림이 덜하고 1에 가까울수록 대물림이 심하다는 의미이다.

- 5.** 이러한 세대간 대물림 심화에는 지역간 격차 확대도 중요한 경로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인구의 절반가량이 출생지역을 떠나지 않는 상황에서 예컨대, 서울과 그 외 지역, 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경제력 격차가 커지는 것은 거주지역의 대물림과 맞물려 경제력의 대물림을 심화시킬 수 있다. 반면 활발한 지역간 이동(이주)<sup>3)</sup>은 일반적으로 자신에게 더 맞는 일자리와 더 나은 경제적 기회를 얻게 해줌으로써 자녀의 경제력을 개선시켜<sup>4)</sup> 세대간 대물림을 완화하는 경향이 있다. 한국노동패널 자료 분석 결과 이주한 자녀의 평균 소득백분위는 부모보다 6.5%p 높아진 반면, 이주하지 않은 자녀는 오히려 부모보다 2.6%p 낮아졌다. 그리고 이주한 자녀 그룹의 소득 및 자산 RRS는 0.13 및 0.26으로 비이주 그룹(0.33, 0.46)보다 훨씬 낮아 이주 그룹에서 대물림이 덜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6.** 주목할 사실은 이주와 함께 세대간 대물림이 완화되는 효과, 즉 이주효과가 출생지와 이주 여부 및 목적지에 따라 크게 다르다는 점이다. 먼저 수도권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수도권 권역 내에서 이주했을 때, 특히 저소득층 자녀를 중심으로 계층 상향이동이 이뤄지고 있었다. 반면 비수도권 출생 자녀들은 수도권으로 이주할 경우 경제력 개선폭이 커졌지만, 이주 유형을 권역<sup>5)</sup>내와 권역 외(권역 밖으로)로 구분했을 때, 광역권역 내부에서 시·도간 이주시에는 그 효과가 과거보다 크게 줄어들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현재 50대) 비수도권 출생자녀가 권역 내 거점도시로 이주한 경우 평균 소득백분위(47.8%)가 수도권 이주 경우(44.9%)보다 높았으나 최근에는(현재 30대) 수도권 이주(50.9%)가 거점도시 이주(48.6%)보다 높다. 출신 대학교별로 보아도 과거에는(50대) 비수도권 출생 중 수도권 대학 졸업자와 거점도시 대학 졸업자의 평균 소득백분위가 각각 62.3%, 61.7%로 비슷했지만 최근에는(30대) 수도권 대학 졸업자(61.8%)가 거점도시 대학 졸업자(53.3%)보다 훨씬 높다. 이는 대학교육을 비롯한 권역 내 거점도시의 중심지 역할이 미흡한 가운데 비수도권에서 다양하고 좋은 일자리를 찾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구조적 여건에도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은 고소득층보다 비수도권 저소득층 자녀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하는데, 저소득층 자녀는 비용부담으로 인해 수도권 이주보다 권역 내 이주를 더 많이 선택하기 때문이다.
- 7.** 결국 비수도권 출생 자녀에게는 수도권으로의 진학 및 이주가 계층 상향이동을 기대할 수 있는 빠른 길이다. 문제는 수도권으로 이주 자체가 부모의 경제력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특히 자산에 따른 격차가 큰데, 부모자산 4분위(상위25%)의 자녀는 1분위(하위25%) 자녀에

3) 본고에서 지역간 이동(이주)은 출생지(시·도)와 현 거주지(시·도)가 다른 경우를 의미한다.

4) 실제 통계에서 지역간 이동한 그룹의 소득/자산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높은 데는 자기선택(selection)과 지역효과(place effect)가 섞여 있다. 본고의 분석 결과 원래 능력이 우수한 사람이 이주한 데 따른 자기선택효과가 없지 않으나 이주에 따른 직접적인 지역효과도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제3장 참조).

5)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동남권(부산, 울산, 경남), 충청권(대전, 충남, 충북), 호남권(광주, 전남, 전북), 대경권(대구, 경북), 강원권, 제주권을 말한다.

비해 수도권 이주화률이 43%p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 이주를 통한 계층 상승의 기회는 부모 경제력이 뒷받침된 자녀들에게만 집중될 수밖에 없다. 다른 한편에서는 고향에 남은(비이주) 저소득층 자녀에서 ‘가난의 대물림’이 심화된다. 비수도권 부모소득 하위50%의 자녀가 여전히 소득 하위50%에 머무는 비율은 과거(71~85년생) 50%대 후반에서 최근(86~90년생) 80%를 넘어섰다<sup>6)</sup>.

8. 따라서 개인 입장에서 비수도권 출생 자녀는 수도권으로 이주할 유인이, 수도권 출생 자녀는 수도권 내 잔류할 유인이 매우 크다. 이는 그간 청년층의 일방적인 수도권 집중이라는 결과로 이어져 왔다. 그러나 개인의 합리적인 결정이 국가 전체로는 지역간 양극화와 사회통합 저해, 나아가 초저출산에 이르기까지 큰 부작용을 초래하는 상황에서 이를 바로잡기 위한 공공의 관여가 불가피하다.
9. 출생 및 거주지역과 맞물려 경제력 대물림이 심화되는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용이 될 재목이 강으로’ 가는 것을 돋는 이동성 강화와 더불어, 보다 근본적으로는 지역의 ‘작은 개천을 큰 강으로 털바꿈’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교육시스템과 공공투자의 역할이 중요한데, 먼저 비수도권 저소득층 학생의 이동성 강화를 위해 ‘지역별 비례선발제’ 등을 통해 서울 상위권 대학으로 진학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비수도권 거점대학의 교육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소수의 거점대학이 특정 분야만이라도 서울 상위권 대학에 준하는 경쟁력을 갖추도록 ‘선택과 집중’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10. 또한 비수도권의 산업기반 및 일자리를 개선하기 위해 우선은 거점도시에 대한 집중 투자가 긴요하다. 향후 인구 감소와 재정여력 축소를 감안하면 거점도시 중심의 지역 성장은 비수도권 내에서 지역간 이동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세대 간 대물림을 완화하는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행정구역 통합 및 광역권 거버넌스 개편도 거점도시의 위상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

6) 부모소득 하위50% 자녀의 소득 상위25% 진입비율은 13%에서 4%로 악화되었다.

## II. 우리나라의 세대간 경제력 대물림 추정

**11.** 전통적으로 세대간 경제력 대물림의 정도를 평가하는 대표적인 지표는 세대간 소득탄력성(IGE: Intergenerational Income Elasticity)이다. 이는 부모소득이 1%p 증가했을 때 자녀소득이 몇 %p 증가하는지를 추정한 값이다. 세대간 소득탄력성은 아래와 같은 회귀식(1)을 통해 측정하며, 그래프로 표현하면(<그림 1>) 가로축에 부모소득, 세로축에 자녀소득을 놓았을 때 그 기울기라고 할 수 있다. 기울기가 1이면 부모-자녀간 소득수준이 동일한 것이므로 완전한 대물림을 의미하며, 기울기가 1보다 작아질수록 부모-자녀 간 경제력의 상관관계가 약화되어 대물림도 완화됨을, 다시 말해 세대간 소득계층의 이동성(intergenerational income mobility)은 높아짐을 뜻한다.

$$\ln y_i = \alpha + \beta \ln y_{pi} + a_1 A_i + b_1 A_{pi} + b_2 A_{pi}^2 + X_i' \theta + \varepsilon_i \quad (1)$$

- $y_i, y_{pi}$  : 자녀 및 부모의 평생 소득
- $A_i, A_{pi}$  : 소득 관측 시점 자녀 및 부모의 나이
- $X_i$  : 자녀 및 부모 성별, 출생순위(예: 첫째 등), 출생코호트, 출생지역 등

**12.** 그런데 금액 기준의 소득탄력성으로는 세대간 대물림의 정도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많다<sup>7)</sup>.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소득탄력성의 대안으로 세대간 소득백분위 기울기(RRS: Rank-rank slope)가 더 의미 있는 세대간 대물림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이는 위의 식(1)에서 설명변수를 부모 소득백분위로, 종속변수를 자녀 소득백분위로 바꾼 식(2)을 통해 측정한다. 여기서 소득백분위란 같은 연령대의 사람들을 소득 크기 순으로 나열한 후 그 순위를 100% 기준 백분위(percentile)로 표시한 값이다. 소득백분위가 높을수록 소득 및 그 순위가 높다는 뜻이며, 소득백분위 기울기(RRS)는 부모 소득순위(rank)가 100명 중 1위 상승했을 때 자녀 소득순위는 몇 위나 상승하는지를 나타낸다. 따라서 IGE와 마찬가지로 RRS도 높을수록 세대간 대물림이 심하다는 의미이다.

$$\text{Rank}(y_i) = \alpha + \beta \text{Rank}(y_{pi}) + a_1 A_i + b_1 A_{pi} + b_2 A_{pi}^2 + X_i' \theta + \varepsilon_i \quad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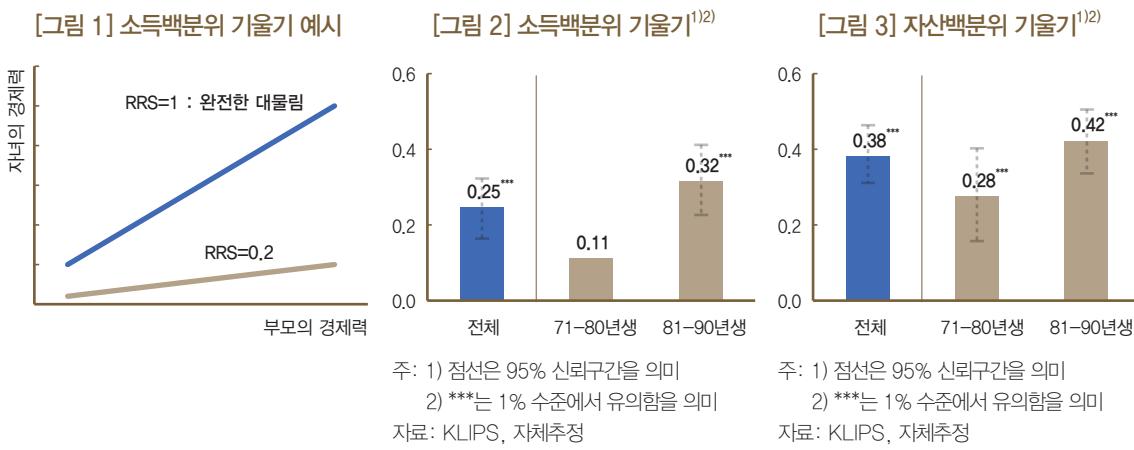
- $y_i, y_{pi}$  : 자녀 및 부모의 평생 소득
- $A_i, A_{pi}$  : 소득 관측 시점 자녀 및 부모의 나이
- $X_i$  : 자녀 및 부모 성별, 출생순위(예: 첫째 등), 출생코호트, 출생지역 등

7) 금액 기준이어서 이상값과 변수간 비선형적 관계에 민감하며 세대간 소득분포의 이질성과 생애주기 중 소득 변화에 따른 왜곡 가능성, 국가간 비교기능성 저하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Chetty et al. 2014, Stuhler 2018, Kenedi & Sirugue 2023).

13. 본고는 우리나라의 세대간 소득백분위 기울기(RRS)를 추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한국노동패널(KLIPS)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노동패널은 조사 가구원의 소득 정보를 1998년부터 2023년까지 26년간 축적하고 있어서 부모소득과 자녀소득 간 관계를 파악하는 데 가장 적합한 가구단위 미시자료이다<sup>8)</sup>.

14. 회귀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소득백분위 기울기(소득 RRS)는 0.25 수준으로 추정되었다<sup>9)</sup>. 이는 부모 소득백분위가 1%p 상승(소득순위가 100명중 1위 상승)하면 자녀의 소득백분위가 0.25%p 상승(소득순위 0.25위 상승)하는 것으로, 선행연구에서 추정한 다른 주요국들의 추정치(0.2~0.4 수준)와 크게 다르지 않아 분석결과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sup>10)</sup>. 주목할 점은 소득 RRS를 시점별로 나눠 추정하면 <그림 2>처럼 최근 세대의 RRS가 크게 상승(71~80년생 자녀: 0.11 → 81~90년생 자녀: 0.32)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세대간 소득 대물림이 최근 심화되면서 소득계층간 이동성이 더 약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sup>11)</sup>.

#### 최근 소득 및 자산 백분위 기울기가 상승 (세대간 경제력 대물림이 심화)



8) 부모와 자녀의 평생소득이 산출되는 60년 정도의 데이터가 필요하나 그러한 자료는 찾기 어렵다. 본고는 부모소득 관찰 시점을 최대한 과거로, 자녀는 최근으로 설정하여 생애주기에 따른 왜곡을 최소화하였다.

9) 부모-자녀 간 경제력의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배경에는 유전효과(selection)와 부모의 교육투자 및 상속과 같은 지원효과(causation)가 섞여 있어서(Fagereng et al., 2019) 세대간 대물림이 어느 정도여야 바람직한지 절대적 기준을 세우기는 어렵다. 그보다는 대물림의 정도가 다른 사회와 비교해서 어떤지, 또는 시간이 흐르면서 달라지는지 등 상대적인 변화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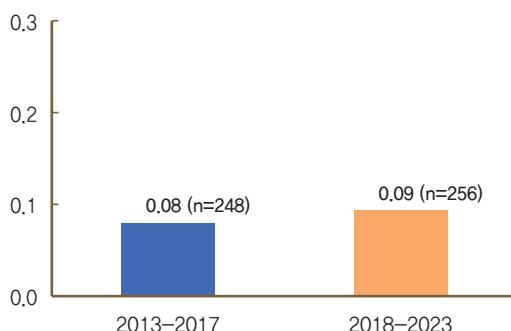
10)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이 각기 다른 기준과 추정방법을 이용하고 있어 국가 간 엄밀한 비교는 어렵다. 다만 대략적인 범위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RRS 수준이 다른 주요 국가들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판단할 수 있다(<참고 1>'세대간 소득탄력성(IGE) 추정 결과 및 선행연구 리뷰' 참조).

11) 만약 자녀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세대간 경제력 대물림이 완화(RRS가 하락)된다면 최근(젊은) 세대의 RRS가 과거(나이 듦) 세대보다 큰 것이 당연한 결과일수 있다. 그러나 연령에 따른 RRS 추정 결과 자녀가 나이 들수록 대물림은 심화(RRS는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ox 1 참조). 따라서 본고에서 추정한 최근 RRS의 상승은 실제 대물림의 심화 현상을 오히려 과소평가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 〈Box 1〉 세대간 대물림의 연령 효과(age effe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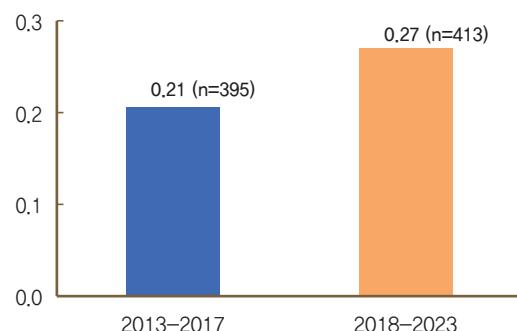
최근 경제력 대물림의 심화가 단순히 연령효과에 기인한 것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고는 자녀가 나이 들수록 세대간 대물림의 정도가 변화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RRS(2018~23년중)를 추정한 한국노동패널 표본의 5년전 소득 RRS(2013 ~17년중)를 추가로 추정하였다. 그 결과 자녀가 더 젊었을 때인 5년전 RRS는 현재보다 더 작은 값으로 추정되었다. 즉 자녀의 나이가 많아지면 대물림이 더욱 심화된다는 의미이다. 이는 사회 초년생 시절에는 부모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지원받아 축적한 인적자본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했을 가능성, 나이가 들수록 부모의 중여 및 유산 상속이 더 증가하는 점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감안하면 1981~90년생 세대가 지금의 1971~80년생 나이가 되면 실제 RRS는 본고의 RRS 상승폭(+0.21)보다 더 크게 상승할(실제 대물림이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

76~80년 출생 자녀의 소득 RRS 변화



자료: KLIPS, 자체추정

81~85년 출생 자녀의 소득 RRS 변화



자료: KLIPS, 자체추정

15. 경제력을 소득만으로 측정하는 것은 세대간 대물림에 대한 전체 그림을 그리기에 부족할 수 있다. 소득은 수시로 변동하고, 평생 동안의 소득을 전부 관찰하기 어려우며, 유량변수(flow)인 소득보다는 저량변수(stock)인 자산(wealth)이 개인의 경제력을 더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대간 대물림도 소득과 별개로 자산의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만 개인 또는 가구의 전체 순자산 규모를 서베이(survey) 자료로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다<sup>12)</sup>. 이에 따라 본고는 전체 자산규모 대신 상대적으로 정확성이 높은 주택자산 규모를 자산(wealth)의 대리변수(proxy)로 이용하였다. 우리나라 가구의 전체 자산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70%가량임을 감안하면 대리변수 활용에 따른 왜곡은 작을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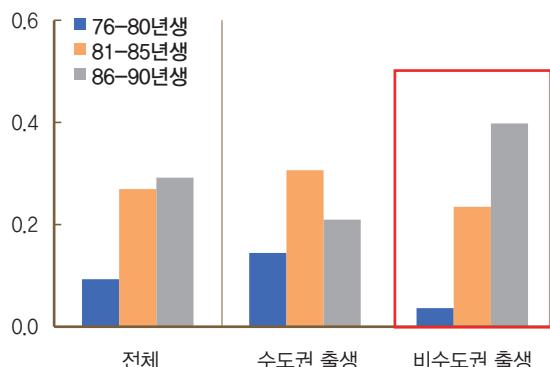
12) 전체 순자산은 부동산자산에 금융자산을 더하고 금융부채를 뺀 값으로 측정되나 한국노동패널 등 서베이 자료에서 조사된 금융 자산과 부채는 부동산자산에 비해 정확도가 크게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상호 2018, 김낙년 2020 등).

16. 우리나라의 세대간 자산백분위 기울기(자산 RRS)는 0.38로, 소득 RRS(0.25)보다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부모 자산순위가 100명 중 1위 상승하면 자녀의 자산순위가 평균 0.38위 상승한다는 의미이다. 국가별 자산의 세대간 대물림 관련 연구는 소득 대물림 연구에 비해 드물고 단순 비교하기도 어렵지만, 일부 선행연구를 보면 우리나라의 자산 대물림이 다른 주요국보다 덜하지는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sup>13)</sup>.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소득과 마찬가지로 자산 RRS도 최근 세대에서 과거보다 상승(71~80년생 0.28 → 81~90년생 0.42)하여 세대간 자산의 대물림도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

17. 특징적인 것은 최근 대물림 심화 현상이 출생지역에 따라 상당히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그림 4, 5>에서 보듯이 출신지역별로 소득 및 자산 RRS를 추정한 결과,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출생 자녀에서 최근 세대의 대물림 심화(소득 및 자산 RRS가 상승)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는 세대간 대물림의 변화에 지역 변수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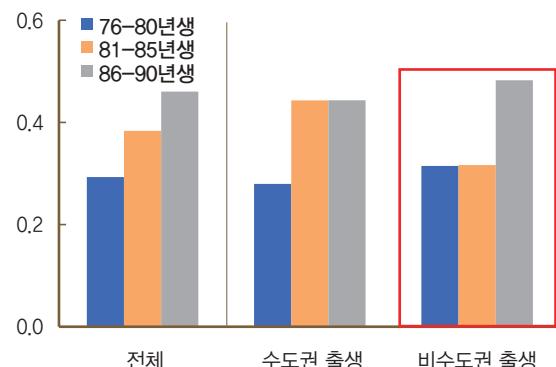
#### 비수도권 출생 자녀에서 최근 세대간 대물림 심화가 더 뚜렷함

[그림 4] 출생지 및 세대별 소득백분위 기울기



자료: KLIPS, 자체추정

[그림 5] 출생지 및 세대별 자산백분위 기울기



자료: KLIPS, 자체추정

13) 예를 들어 미국 가구 패널자료(PSID)를 분석한 연구(Charles & Hurst 2003)는 세대간 자산탄력성을 0.37로, 덴마크 행정자료를 분석한 연구(Boserup et al. 2017)는 세대간 자산백분위 기울기를 0.27로 추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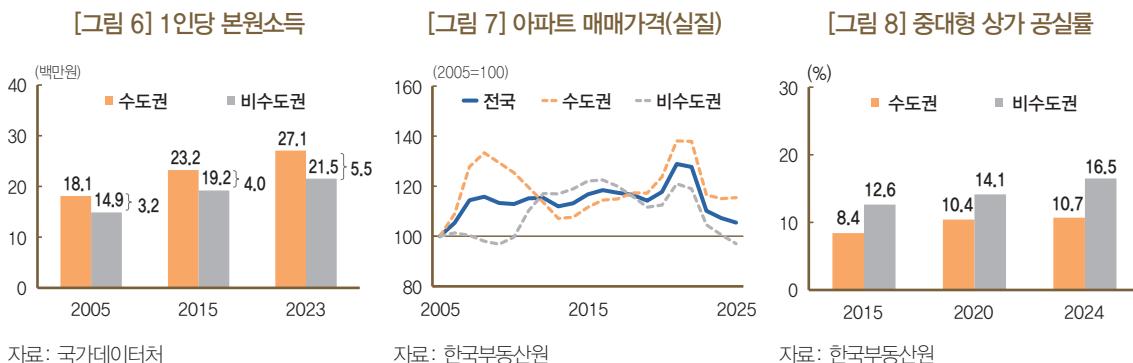
### III. 지역간 인구이동과 세대간 경제력 대물림

#### 1. 거주지역에 따른 경제력 대물림

18. 세대간 경제력의 대물림이 최근 더욱 공고화된 배경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지역간 경제력 격차 확대가 대물림 심화에 일정 부분 기여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세대간 대물림이 소득 및 자산뿐만 아니라 거주지에 대해서도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즉 자녀의 거주지는 부모 거주지와 같거나 인근 지역인 경우가 많다<sup>14)</sup>. 그 결과, 소득이 높은(또는 부유한) 지역에서 태어난 자녀는 그 지역이 가진 우수한 인프라와 노동시장에 힘입어 높은 소득과 자산을 유지하고, 반대로 저소득 지역에서 태어난 자녀는 부모와 마찬가지로 낮은 소득과 자산에 머물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결국 거주지역의 대물림과 맞물려 세대간 경제력의 대물림이 강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19. 특히 우리나라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경제력 차이가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는 비단 지역경제 규모뿐 아니라 개인의 소득과 자산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임금,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을 모두 합한 1인당 (순)본원소득잔액을 보면 수도권-비수도권 간 격차가 2005년 3.2백만원(2020년 가격 기준)에서 2023년 5.5백만원으로 1.7배 증가하였다. 세부 항목별로는 피용자보수(임금), 영업잉여(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의 격차가 모두 비슷하게 커졌다. 자산 측면에서도 우리나라 가구 전체 자산의 약 70%를 차지하는 주택의 경우, 2025년 서울의 아파트매매가격(실질)이 2005년 대비 19.6% 상승하고, 수도권이 15.4% 상승할 동안 비수도권은 -3.0%로 오히려 하락하였다. 상업용 부동산도 2024년 기준 상가중대형 공실률이 수도권 10.7%, 비수도권 16.5%로 지역간 차이가 커지면서 자산가치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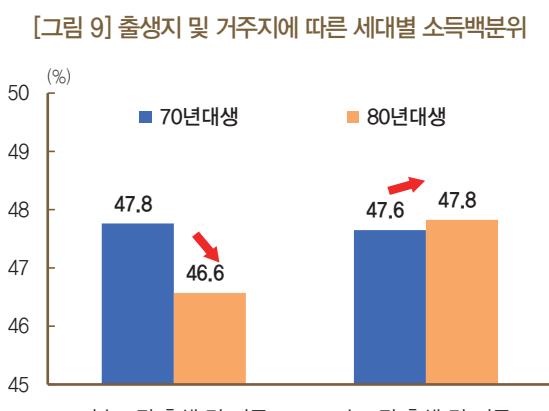
14) 한국노동패널 26차(2023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령이 30~59세인 조사대상자 7,044명중 출생지(부모 거주지의 대리변수)와 현재 거주지가 같은 경우(광역시·도 기준)가 48.6%를 차지하였다. 또한 광역권 기준으로 출생지와 거주지가 같은 경우는 68.1%를 나타냈다.

### 지역(수도권–비수도권) 간 경제력 격차는 갈수록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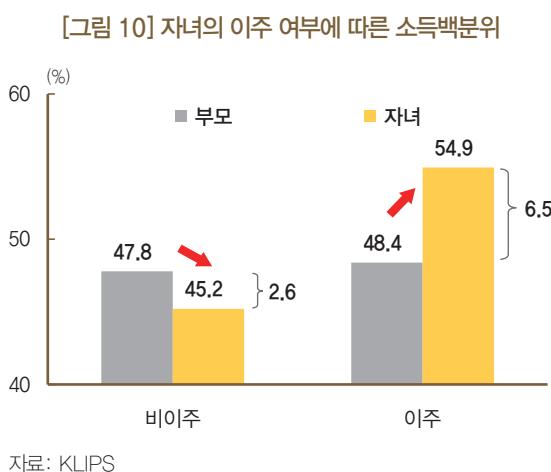


20. 이렇게 지역간 격차가 커지는 상황에서 만약 지역간 이동이 전혀 없고 부모와 자녀의 거주지가 항상 같다면, 수도권 출생 자녀는 갈수록 더 높은 소득과 자산을 얻고 비수도권 출생 자녀는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지역간 격차 확대는 곧 세대간 경제력 대물림의 고착화로 직결된다. 실제로 자녀가 출생지역(부모 거주지)에 계속 머무는 경우가 전체 인구의 절반 정도인데, 이에 따른 출생 및 거주지별 경제력 격차를 통계자료로도 확인할 수 있다. 한국노동패널 26차 자료 분석 결과 ‘비수도권 출생으로 계속 비수도권 거주’하는 사람들의 평균 소득백분위는 과거 세대(70년대생) 47.8%에서 최근 세대(80년대생) 46.6%로 하락한 반면<sup>15)</sup>, ‘수도권 출생이면서 계속 수도권 거주’ 그룹은 동 백분위가 소폭 상승(70년대생 47.6% → 80년대생 47.8%)하였다.

### 출생 및 거주지에 따른 소득 격차



### 이주에 따른 소득 개선



15) 비수도권 출생이지만 수도권으로 이주하여 현재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그룹의 평균 소득백분위는 70년대생 51.3%에서 80년대생 52.9%로 상승하였다.

- 21.** 이런 상황에서 자녀들이 더 높은 소득을 얻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선택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일반적으로 경제력이 개선된다. 한국노동패널 자료에서도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자녀의 평균 소득백분위(49.8%)가 이주하지 않은 자녀(46.6%)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이주 행위가 자신에게 더 맞는 교육, 일자리 등 더 나은 경제적 기회를 찾아가는 매칭(matching) 과정이라는 점에서 자연스러운 결과라 하겠다.
- 22.** 나아가 자녀가 이주한 이후에는 부모보다도 경제력이 개선되는 경우가 많다. 노동패널 자료(21~26차)로 부모와 자녀의 데이터를 매칭하여 소득수준을 비교한 결과, 이주한 자녀의 소득 백분위는 부모보다 평균 6.5%p 높았으나 이주하지 않은 자녀는 부모보다 오히려 2.6%p 낮았다(<그림 10>). 이러한 경제력 개선폭이 부모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다면, 이주가 세대간의 경제력 대물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경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 자녀가 이주했을 때 소득 증가폭이 고소득층 자녀보다 크다면 지역간 이주는 세대간 대물림을 완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 23.**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가 그 자체로 경제력 개선의 원인인지 여부는 추가적인 분석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이주한 자녀들이 이주하지 않은 자녀들보다 원래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라면 이주와 경제력 개선의 상관관계는 사실 능력 차이(selection)에 따른 결과일 뿐이며, 이주 자체가 경제력에 미치는 인과관계(causality)는 없을 수도 있다. 이러한 오류의 가능성은 일반적으로 선택편의(selection bias)라고 하는데, 현실에서 관찰되는 이주와 경제력 간의 상관관계, 즉 이주한 사람의 경제력이 더 높은 배경에는 자기선택 효과(self-selection)와 지역효과(place effect)가 모두 섞여 있다(Kenedi & Sirugue 2023).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보면 대부분 이주로 경제력이 개선되는(이주 그룹의 경제력이 비이주 그룹 보다 높은) 이유가 선택편의보다는 이주한 지역의 특성, 예를 들면 활발한 경제활동 및 우수한 교육시스템 등에 주로 기인한다고 판단하였다(Soria & Medina 2025, Britto et al. 2022, Chetty & Hendren 2018). 우리나라에서도 청년패널, 한국노동패널 등 여러 자료를 이용한 분석 결과 이주에 동반된 경제력 개선 중 상당 부분이 지역효과(place effect)에 기인함에 따라 이주가 개인의 소득 상승에 있어 중요한 경로인 것으로 나타났다(<Box 2> 참조). 이에 근거하여 본고에서도 이주효과란 이주에 직접 기인한 경제력 개선 또는 대물림 완화 효과를 의미한다.

## 〈Box 2〉 이주에 따른 소득 개선효과의 자기선택편의 검증

청년패널 2019년 자료 분석 결과 이주한(현 거주지와 14세 때 거주지가 다른)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임금이 평균 8.2% 높게 나타났다. 그런데 성별, 나이, 출생지 등 인구학적 특성과 함께 수학능력시험 점수(구간), 교육수준 등을 통제한 임금방정식을 추정하면 그 차이(3.7%)가 크기는 축소되지만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특히 개인능력을 최대한 통제하기 위해 수능점수 구간이 같은 표본끼리 따로 임금방정식을 추정했을 때도 이주효과(지역효과)가 상당 부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표를 보면 관측치 개수가 작은 수능점수 1구간(상위 0~10%) 표본에서는 이주효과가 유의하지 않았으나 2구간(11~30%)과 3구간(31~70%)에서는 이주 그룹의 임금이 비이주 그룹보다 각각 6.4%, 6.6%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에 더해 선택편의를 완화하기 위해 한국노동패널 자료에 매칭 추정법을 적용한 결과에서도 이주에 따른 임금 상승폭이 약 5~6%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주 그룹과 비이주 그룹 간 소득백분위 격차를 추정한 결과에서도 OLS 추정치가 5.0%p였는데 매칭 추정법을 적용해도 4~5%p 수준으로 추정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따라서 이주에 따른 임금 상승폭의 상당 부분은 개인 특성에 따른 자기선택효과가 아니라 이주 자체에 기인한 지역효과라고 판단할 수 있다.

**선택편의 완화를 위한 매칭 추정법 적용 및 수능점수 통제 결과**

	로그소득	소득백분위	구분	이주효과 (표준오차)	관측치수
OLS	0.04*	5.04*	전체표본: 통제변수없음	0.082*** (0.02)	3,361
	(0.02)	(0.01)	통제변수포함	0.037** (0.02)	2,598
Nearest Neighbor	0.06**	4.08*	수능점수: 1구간	0.052 (0.06)	274
Matching	(0.02)	(0.07)	2구간	0.064* (0.04)	756
Propensity Score	0.05*	4.89*	3구간	0.066** (0.03)	896
Matching	(0.02)	(0.04)	4구간	0.031 (0.06)	215
관측치수	2,598	593	5구간	0.159 (0.25)	33

자료: KLIPS, 자체추정

자료: 청년패널, 자체추정

## 2. 지역간 이동이 세대간 대물림에 미치는 영향

**24.** 우리나라에서 세대간 경제력 대물림과 지역간 이동(이주)<sup>16)</sup>이 어떻게 연관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앞서 추정한 식(2)에 이주여부 더미변수와 부모 경제력 변수의 교차항을 포함하였다. 여기서 식 (3)은 이주에 따른 두 가지 변화를 포착하게 되는데 먼저 ① 이주하였을 때 비이주 그룹에 비해 경제력이 개선되는 효과(absolute mobility)는 이주여부 더미변수의 추정치, 즉 상수항의 증가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② 이주가 세대간 경제력 대물림(relative mobility)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이주더미와 부모 경제력의 교차항 회귀계수, 즉 부모 경제력과 자녀 경제력 간 기울기의 변화로 나타나게 된다. 만약 동 교차항의 회귀계수가 음(−)으로 추정된다면 자녀 경제력에 대한 부모의 영향력이 이주 그룹에서 비이주 그룹에 비해 작음을, 즉 이주 그룹의 세대간 대물림이 비이주 그룹보다 덜하다는 의미이다.

$$\text{Rank}(y_i) = \alpha + \beta \text{Rank}(y_{pi}) + \gamma MIG_i + \delta (\text{Rank}(y_{pi}) \times MIG_i) + a_1 A_i + b_1 A_{pi} + b_2 A_{pi}^2 + X_i' \theta + \varepsilon_i \quad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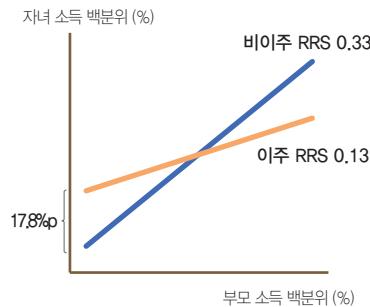
- $y_i, y_{pi}$  : 자녀 및 부모의 평생 소득
- $MIG_i$  : 자녀의 이주 여부 (0=비이주, 1=이주)
- $A_i, A_{pi}$  : 소득 관측 시점 자녀 및 부모의 나이
- $X_i$  : 자녀 및 부모 성별, 출생순위(예: 첫째 등), 출생코호트, 출생지역 등

**25.** 회귀분석 결과 우리나라에서 자녀의 이주는 세대간 경제력 대물림을 완화하는, 다시 말해 세대간 계층이동을 활발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1>에서 볼 수 있듯이 이주한 자녀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소득백분위(percentile)가 평균적으로 17.8%p 상승하였고 세대간 소득 백분위 기울기(소득 RRS)는 1/3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자산 기준으로도(<그림 12>) 이주는 세대간 대물림을 완화한다. 이주 그룹의 자산백분위는 비이주 그룹보다 평균 16.5%p 상승하였으며 세대간 자산백분위 기울기(자산 RRS)는 절반 가까운 수준으로 작아졌다.

16) 본고에서 지역간 이동(이주)은 자녀가 태어난 광역지방자치단체(시·도)에서 벗어나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이동한 경우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한국노동패널 데이터에서 출생지(광역시·도)와 현재 거주지(광역시·도)가 다른 경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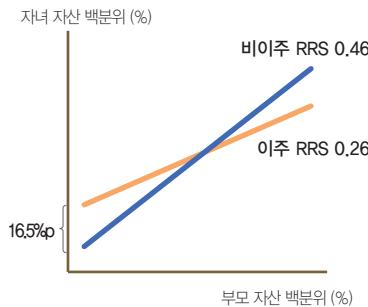
### 이주 그룹의 세대간 대물림이 비이주 그룹에 비해 덜함

[그림 11] 이주효과(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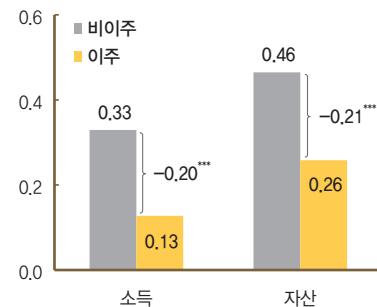
자료: KLIPS, 자체추정

[그림 12] 이주효과(자산)



자료: KLIPS, 자체추정

[그림 13] 소득 및 자산 R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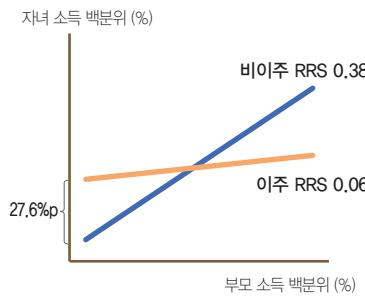
자료: KLIPS, 자체추정

26. 앞서 2장에서 세대간 대물림의 심화가 비수도권 출생자녀에서 더 뚜렷함을 확인한 바 있는데, 이주가 세대간 대물림을 완화하는 효과도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다음 절에서는 이주와 세대간 대물림 간의 관계가 출생지로 구분한 두 그룹(수도권 vs 비수도권)에서 어떻게 다른지 파악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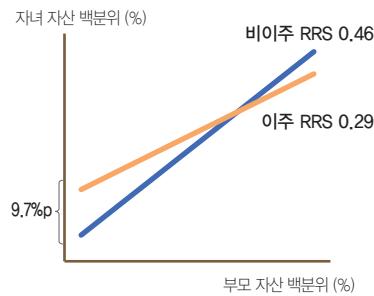
#### 가. 수도권 출생 자녀들의 이주와 세대간 경제력 대물림

27. 먼저 수도권 출생 자녀들에 한정하여 이주 그룹과 비이주 그룹 간에 세대간 경제력 대물림의 차 이를 살펴보았다. 앞 절의 식(3)을 수도권 출생 자녀 표본으로 추정한 결과 이주 그룹의 소득백분위는 비이주 그룹에 비해 평균 27.6%p 높았다. 그리고 소득백분위 기울기(소득 RRS)는 이주 그룹(0.06)이 비이주 그룹(0.38)보다 현저히 작아 이주 그룹에서 세대간 경제력 대물림이 훨씬 약하게 나타났다(<그림 14>). 자산 기준으로는 이주 그룹의 자산백분위가 비이주 그룹에 비해 평균 9.7%p 높고, 자산백분위 기울기(자산 RRS)는 이주 그룹(0.29)이 비이주 그룹(0.46)에 비해 0.17 낮았다(<그림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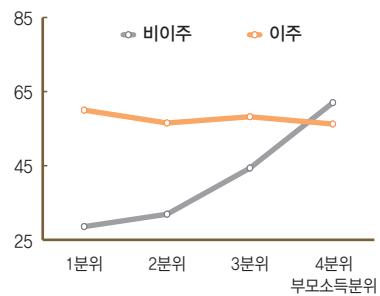
### 수도권 자녀는 이주에 따른 소득 개선폭이 저소득층일수록 큼

[그림 14] 수도권 출생 자녀의  
이주효과(소득)

자료: KLIPS, 자체추정

[그림 15] 수도권 출생 자녀의  
이주효과(자산)

자료: KLIPS, 자체추정

[그림 16] 수도권 출생 자녀의  
부모소득 분위별 경제력<sup>1)</sup>

주: 1) 소득 상위50% 진입 비율

자료: KLIPS

**28.** 부모-자녀 간 경제력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그림 16>을 보면 수도권 출생 자녀들의 이주효과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그림에서 가로축은 부모 소득수준을 4분위로 나누어 표시한 부모 소득분위<sup>17)</sup>이며 세로축은 그 자녀의 소득이 3~4분위(상위50%)에 속하는 비율이다. 만약 부모 소득이 높을수록(소득분위가 높을수록) 자녀의 소득 상위50% 비율도 높다면 세대간 대물림이 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9.** 먼저 부모소득 1분위(소득 하위25%) 자녀가 소득 3~4분위(상위50%)에 진입하는 비율의 그룹 간 차이를 보면, 이주 그룹(60.0%)이 비이주 그룹(28.6%)보다 30%p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났다. 2분위 자녀는 이주 그룹(56.5%)이 비이주 그룹(31.9%)보다 24.6%p 높았고, 3분위 자녀는 이주 그룹(58.2%)이 비이주 그룹(44.3%)보다 13.9%p 높았다<sup>18)</sup>. 이처럼 이주에 따른 소득 개선폭이 부모소득이 높아질수록 축소됨에 따라 이주 그룹에서는 부모-자녀 경제력의 기울기가 평탄화되면서 세대간 경제력의 상관관계가 거의 사라지는 반면, 비이주 그룹에서는 동 비율이 부모소득에 비례하여 상승하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요약하면 수도권 출생 자녀 중에서는 부모소득이 낮을수록 이주에 동반된 소득 개선폭이 커서 이주가 세대간 대물림을 약화하는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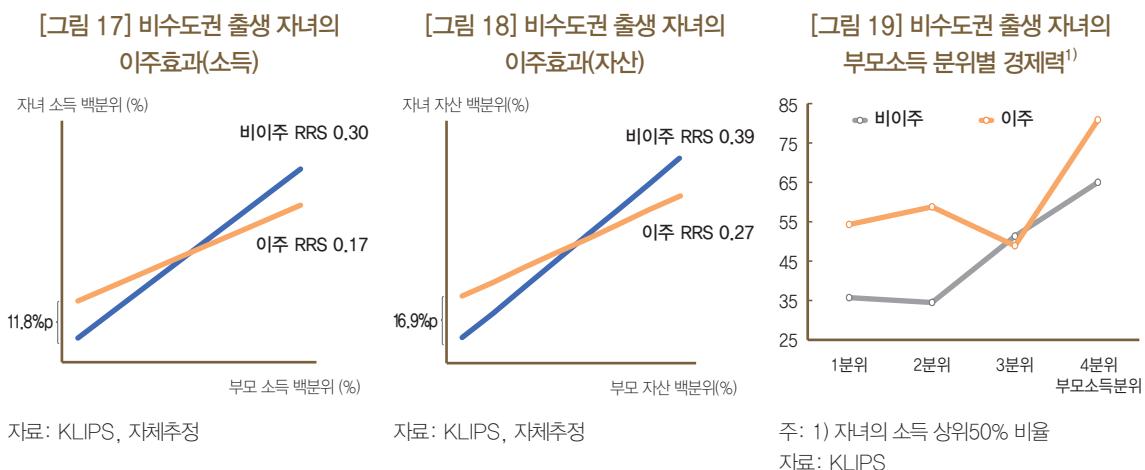
17) 전체 집단을 소득 순위 기준으로 4개 그룹으로 나누어 가장 소득이 낮은 그룹은 1분위(하위25%), 가장 높은 그룹은 4분위(상위 25%)로 표시 한다.

18) 4분위 자녀의 경우 이주 그룹(56.3%)이 비이주 그룹(62.0%)보다 소폭 낮았다.

## 나. 비수도권 출생 자녀들의 이주와 세대간 경제력 대물림

- 30.** 비수도권 출생 자녀들의 경우에도 이주 그룹에서 비이주 그룹보다 세대간 경제력 대물림이 완화되었다. 그러나 그룹간 차이는 수도권 출생 자녀에 비해 상당히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의 이주로 세대간 경제력 대물림이 완화되는 경로가 비수도권에서는 수도권보다 약하게 작동함을 시사한다.
- 31.** 회귀분석 결과 비수도권 출생 자녀 중 이주 그룹의 소득백분위는 비이주 그룹에 비해 평균 11.8%p 높았는데 이러한 차이는 수도권(27.6%p)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소득백분위 기울기(소득 RRS)도 이주 그룹(0.17)이 비이주 그룹(0.30)에 비해 작아 이주 그룹에서 세대간 대물림이 완화되길 하였으나 그룹간 격차(0.13)는 수도권(0.32)에 비해 현저히 작았다. 비수도권 출생 자녀들과 그 부모의 경제력 간 관계를 보여주는 <그림 19>에서 비수도권 소득 1분위(하위25%) 부모의 자녀가 소득 3~4분위(상위50%)에 진입하는 비율은 이주 그룹 54.3%, 비이주 그룹 35.7%로 그룹간 차이(18.6%p)가 수도권(31.4%p)보다 훨씬 작다. 그리고 소득 4분위(상위25%) 부모의 자녀는 동 비율이 이주 그룹 80.9%, 비이주 그룹 65.0%로 상당한 차이(15.9%p)를 보여 부모소득이 높을수록 이주 그룹과 비이주 그룹 간 차이가 줄어든 수도권과 상반된 모습이다. 즉 수도권에서 저소득층 자녀일수록 이주를 통한 소득 개선효과가 커던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그러한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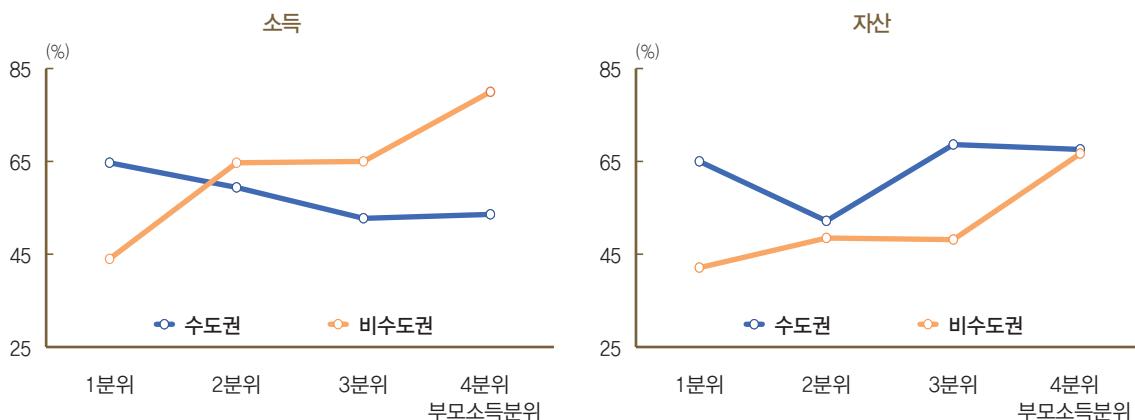
### 비수도권 자녀는 지역간 이주에 따른 대물림 완화 효과가 수도권보다 작음



32. 이주를 통한 계층상승 효과가 비수도권 출생 자녀들에게 작은 것은 특히 저소득층 자녀들의 권역 내 이주<sup>19)</sup>에 따른 경제력 개선효과가 크지 않은 데 주로 기인한다. 여기서 권역 내 이주란 우리나라 7대 광역권을 기준으로 권역 안에서 시도간 이주를 의미하며 권역 외 이주는 다른 권역으로의 이주를 뜻한다. <그림 20>을 보면 수도권에서는 부모소득 1분위 자녀가 권역 내 이주시 소득 상위50% 진입 비율이 2~4분위 자녀보다 오히려 더 높다. 자산 기준으로는 부모자산 1분위 자녀의 동 비율은 3~4분위 자녀와 비슷한 수준이다. 따라서 수도권의 저소득층 자녀들은 권역 내 이주를 통한 계층 상향이동이 활발하고, 이는 세대간 대물림의 약화를 의미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비수도권 출생 저소득층 자녀가 권역 내 이주했을 때는 소득 3~4분위(상위50%) 진입 비율이 크게 높아지지 않는다. 오히려 부모가 소득 또는 자산이 높을수록 자녀의 경제력도 높게 나타나 세대를 이어 계층이 고착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 비수도권 저소득층 자녀는 ‘권역 내’ 이주시 경제력 개선 가능성성이 작음

[그림 20, 21] 권역 내 이주에 따른 자녀 경제력<sup>1)</sup>



주: 1) 자녀의 소득 상위50% 비율

자료: KLIP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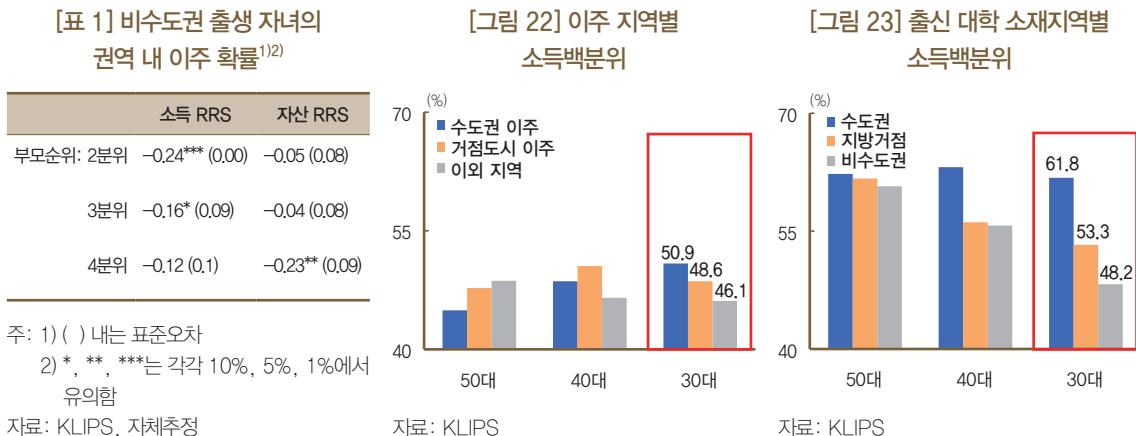
33. 이렇게 비수도권에서 권역 내 이주의 경제력 개선효과가 작은 것은 특히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저소득층 자녀 입장에서는 주거비용 등 물가 부담이 큰 서울 및 수도권보다 고향에 인접한 지역 거점도시 등 권역 내 이주가 훨씬 용이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비수도권 출생 자녀의 이주 패턴을 보면<sup>20)</sup>, 부모소득 1분위(하위25%) 자녀는 소득 4분위(상위25%) 자녀에 비해 권역 내 이주 확률이 12%p 높고, 자산 기준으로 자산 1분위 자녀의 권역 내 이주 확률도

19) 이때 권역 내 이주란 광역권 내에서 다른 시·도로의 이주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수도권 내 이주는 서울-인천-경기 간의 이동이고, 동남권 내 이주는 부산-울산-경남 간의 이동이다.

20) 성별, 출생지역, 세대(cohort) 등을 통제한 가운데 로짓모형을 추정하였다.

4분위 자녀보다 23%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수도권의 저소득층 자녀들은 수도권 권역 내에서 이주를 통해 계층 상향이동의 기회를 보다 수월하게 가질 수 있는 반면, 권역 내 이주를 선택한 비수도권 저소득층 자녀들이 얻는 계층 이동 및 대물림 완화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 저소득층/저자산층 자녀는 권역 내 이주 확률 높으나 이를 통한 계층상승 가능성은 축소



34. 이러한 현상은 수도권이 권역 내 지역간 산업구조가 차별화되어 일자리가 다양하고 지식기반산업의 집적으로 소득도 높아 두터운 노동시장(thick labor market)을 갖추고 있는 데 상당 부분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반대로 비수도권의 경우 지역간 분업구조가 고도화되지 않은 가운데 권역 내 중심지 역할을 해야 할 거점도시의 위상이 계속 약화되었고, 산업경쟁력 위축으로 다양하고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점이 권역 내 이주의 이익을 축소시킨 것으로 보인다(정희완 외 2025, 정민수 외 2023).

## 수도권 내 지역간 산업구조 차별화

## 비수도권 거점도시와 서울 간 격차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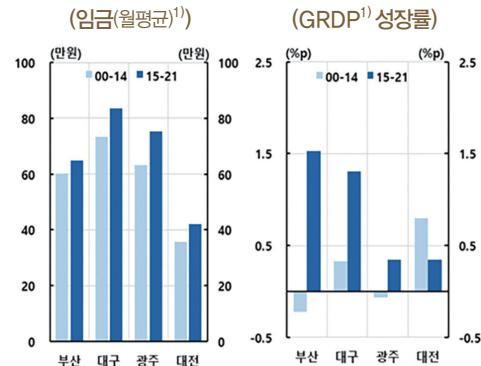
[표 2] 권역 내 지역간 산업경합도<sup>1)</sup>

제조업	2007-09 (A)		2017-19 (B)		차이 (B-A)	
	서울 경기	부산 경남	서울 경기	부산 경남		
서울 경기	0.41	0.38	-0.03	0.78	0.8	0.02
부산 경남	0.66	0.74	0.08	0.83	0.88	0.06
대구 경북	0.4	0.48	0.09	0.88	0.86	-0.02
광주 전남	0.15	0.15	0	0.8	0.82	0.01
대전 충남	0.49	0.56	0.07	0.86	0.88	0.02

주: 1) 산업구조가 비슷할수록 1에 가까움

자료: 국가데이터처

[그림 24] 서울 및 거점도시 임금, 성장률 차이



주: 1) 1인당 실질금액 기준

자료: 국가데이터처, 정민수 외(2023)에서 재인용

## 다. 수도권 이주 여부에 따른 비수도권 출생 자녀 계층간 격차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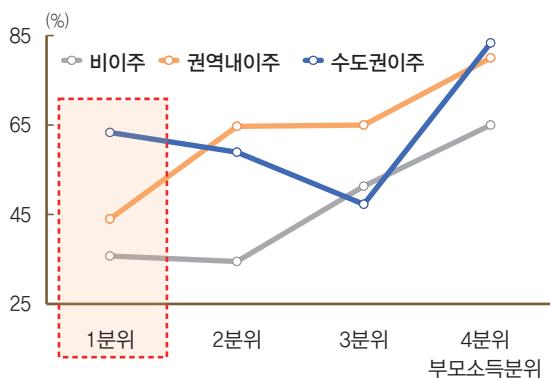
35. 비수도권 출생 자녀들이 권역 내 이주로 얻는 이득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 수도권으로 이주에 따른 경제력 개선폭은 더욱 커지고 있다. 예를 들어〈그림 22〉과거에는 현재(50대, 40대)<sup>21)</sup> 비수도권 출생이면서 비수도권 거점도시로 이주한 경우 평균 소득백분위(47.8%, 50.5%)가 수도권으로 이주한 경우(44.9%, 48.6%)보다 오히려 더 높았다. 그러나 최근 세대(30대)로 오면 수도권 이주시 소득백분위(50.9%)가 비수도권 거점도시 이주(48.6%) 경우보다 높다. 그리고 출신 대학교 소재지별로 평균 소득백분위를 보아도(〈그림 23〉) 과거 세대(50대)는 출신 대학교 소재지에 따라 큰 차이가 없었으나 최근 세대(30대)는 수도권(61.8%), 거점도시(53.3%), 그 외 지역(48.2%)으로 순서가 뚜렷하고 그 격차도 크게 확대되었다.

36. 비수도권 출생 저소득층 자녀 그룹으로 좁혀 보아도 수도권으로의 이주가 계층 상향이동을 기대 할 수 있는 빠른 길이다. 〈그림 25〉에서 비수도권 부모소득 1분위(하위25%) 자녀가 소득 상위 50%에 진입한 비율을 비교하면 비이주 그룹이 35.7%, 권역 내 이주 그룹은 44.0%인 데 비해 수도권으로 이주한 그룹은 63.3%로 훨씬 높게 나타났다.

21) 여기서 30대, 40대, 50대는 한국노동패널 26차 조사연도인 2023년도의 나이를 기준으로 분류한 것이다.

37. 문제는 저소득층 자녀가 수도권으로 이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비수도권 부모소득 1분위(하위25%) 자녀의 수도권 이주 확률을 추정한 결과<sup>22)</sup> 부모소득 4분위(상위25%) 자녀에 비해 15%p 낮았고, 자산 기준으로는 부모자산 1분위 자녀의 수도권 이주 확률이 4분위 자녀보다 무려 43%p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비수도권 저소득층/저자산층 자녀의 수도권 이주 가능성은 낮음

[그림 25] 비수도권 자녀의 경제력<sup>1)</sup>

주: 1) 소득 상위50% 비율

자료: KLIPS

[표 3] 비수도권 출생 자녀의 수도권 이주 확률<sup>1)(2)</sup>

	소득	자산
부모순위: 2분위	0.20*** (0.08)	0.06 (0.07)
3분위	0.17** (0.08)	0.13* (0.08)
4분위	0.15 (0.10)	0.43*** (0.09)

주: 1) () 내는 표준오차

2) \*, \*\*, \*\*\*는 각각 10%, 5%, 1%에서 유의함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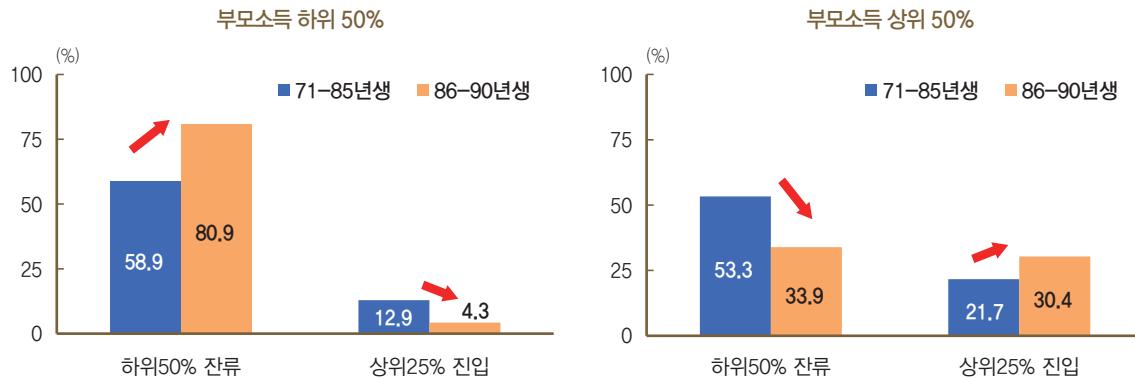
자료: KLIPS, 자체추정

38. 다른 한편에서는 비수도권에서 태어나 고향에 남은 비이주 그룹에서 '가난의 대물림'이 최근 크게 심화되고 있다. 비수도권 출생 자녀중 비이주 그룹에서 부모소득 하위50% 자녀가 여전히 소득 하위50%에 머문 비율을 계산한 결과 과거 세대(71~85년생)에서는 50% 후반이었으나 최근 세대(86~90년생)에서는 80%를 넘어섰다. 이와 함께 동 그룹에서 소득 상위25%로 상향 이동한 비율은 과거 13%에서 최근 4%로 거의 1/3 수준으로 하락하였다(〈그림 26〉). 이와 대조적으로 부모소득 상위50%의 자녀가 소득 하위50%로 떨어지는 비율은 과거 53.3%에서 최근 33.9%로 크게 줄어들었으며 동시에 상위25%에 진입한 비율은 21.7%에서 30.4%로 상승하였다(〈그림 27〉).

22) 성별, 출생지역, 세대(cohort) 등을 통제한 가운데 로짓모형을 추정하였다.

### 비수도권 저소득층이면서 이주하지 않은 자녀 그룹에서 가난의 대물림이 심화

[그림 26, 27] 비수도권 출생+비이주 자녀의 평균 소득백분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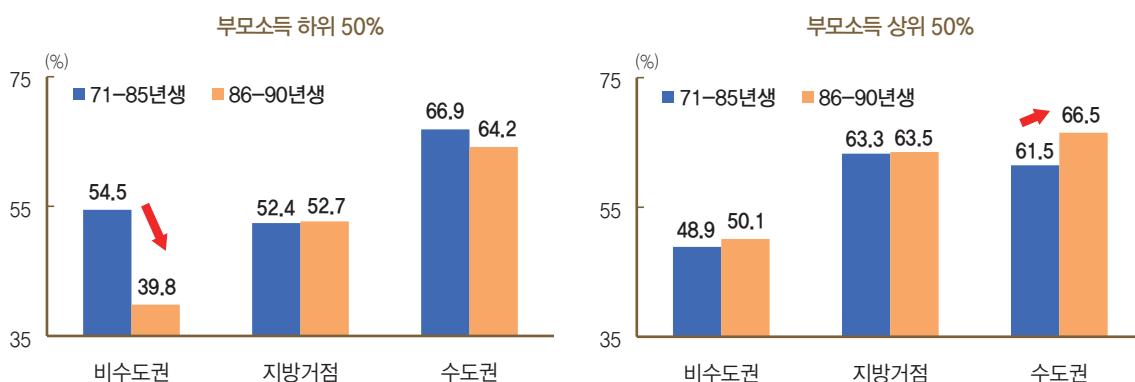


자료: KLIPS

39. 이렇게 (비수도권+저소득층+비이주) 그룹에서 가난이 대물림되는 가운데 (비수도권+고소득층+수도권 이주) 그룹과의 경제력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 예를 들어 비수도권 부모소득 하위50%의 자녀가 비수도권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 기대되는 평균 소득백분위는 과거(71~85년생) 54.5%에서 최근(86~90년생) 39.8%로 떨어졌고, 비수도권 거점대학교 입학시에는 52% 수준에서 정체되었다. 반면 부모소득 상위50%의 자녀가 수도권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 평균 소득백분위는 61.5%에서 66.5%로 상승하였다. 비수도권 내에서 이러한 그룹 간 경제력 격차가 확대된 것은 최근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세대간 대물림 심화에 상당 부분 기여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저소득층+비수도권 대학졸업)과 (고소득층+수도권 대학졸업) 간 소득격차 확대

[그림 28, 29] 비수도권 자녀의 부모소득별 및 출신대학별 평균 소득백분위



자료: KLIPS

## IV. 종합평가 및 시사점

### 1. 종합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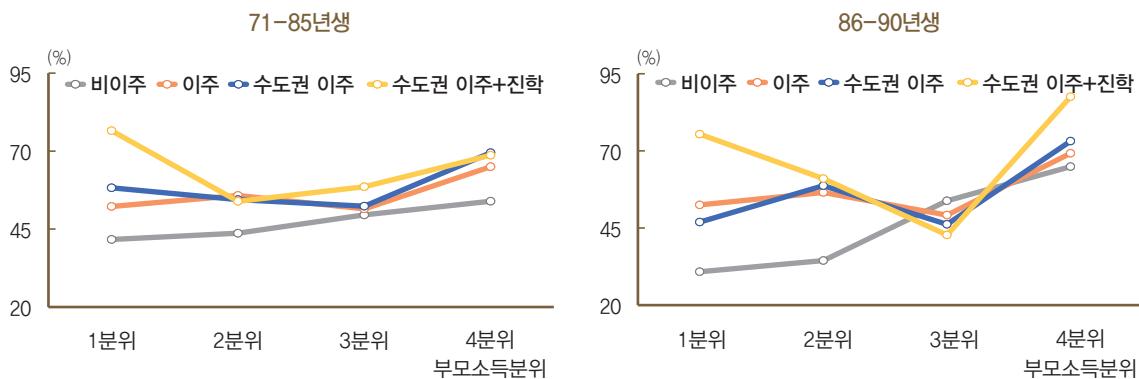
- 40.**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세대간 경제력의 대물림이 심화되고 있다. 이는 소득과 자산 측면에서 세대간 계층 이동성이 약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지역간 경제력 격차의 확대는 그러한 세대간 대물림을 강화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셋째, 지역간 이동(이주)은 저소득층 자녀의 경제적 성과를 개선함으로써 세대간 대물림을 완화하지만, 이러한 효과는 비수도권보다 수도권 권역 내 이주에서 훨씬 더 뚜렷하게 관찰된다. 넷째, 비수도권 저소득층 자녀의 경우 비용 부담이 큰 수도권 이주보다 권역 내 이주가 용이하지만, 비수도권에서 권역 내 이주를 통한 계층 상승의 희망은 시간이 갈수록 옅어지고 있다. 다섯째, 반면 수도권 이주에 따른 경제력 개선 효과가 확대되었는데 수도권으로 이주 가능성은 부모의 경제력이 클수록 높아지는 기회의 불평등이 나타나고 있다.
- 41.** <그림 30, 31>은 그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여준다. 회색선은 비이주 그룹, 주황색선은 이주 그룹, 파란색선은 그중에서도 수도권 이주 그룹, 노란색선은 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후 수도권 거주하는 그룹을 나타내며 각 점들은 해당 그룹의 평균 소득백분위이다. 먼저 비이주 그룹을 보면 과거에는 부모-자녀 경제력 간 기울기가 크지 않았으나 최근 상당히 가팔라진 모습인데 이는 대물림의 심화를 보여준다. 그리고 부모소득 4분위(상위25%) 자녀는 수도권 대학 진학 및 수도권 거주 경우의 경제력 개선폭이 최근 더욱 커졌다. 이와 함께 전반적으로 그룹간(실선 색깔별) 경제력 격차가 과거보다 확대되었다. 물론 부모소득 1분위(하위25%) 자녀도 수도권 대학 진학 및 수도권 거주를 하면 큰 폭의 계층 상향이동이 가능하지만, 앞서 지적했듯이 저소득층 자녀는 수도권 이주 가능성이 낮다. 결국 비수도권의 경기부진 지속 및 좋은 일자리 부족과 더불어 고소득층 자녀 중심의 수도권 진학 및 이주가 우리나라의 최근 세대간 경제력 대물림 심화에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sup>23)</sup>.

23) 물론 세대간 대물림의 심화에는 매우 다양한 원인이 있겠으나 본고에서는 지역간 이주와의 관련성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참고2> '세대간 경제력 대물림 심화와 이주 행태 및 효과의 연관성' 참조).

**42.** 향후 일자리, 주택가격 등 지역간 격차가 더욱 확대될 경우 부모의 거주지역과 경제력에 따른 세대간 계층이동의 장벽이 더 높아질 것이다. 현재로선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개인 입장에서 자녀의 경제력을 높이기 위해 자녀를 수도권으로 이주시킬 유인이 매우 크다. 더불어 수도권에서 태어난 자녀들도 계층 상향이동(또는 부모가 고소득/고자산이라면 계층 유지)을 위해 수도권에 잔류할 유인이 크다. 이는 그간 청년층 인구의 일방적인 수도권 집중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개인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결정이 반드시 사회 전체로도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다. 특히 과도한 수도권 집중은 비수도권 성장잠재력 저하에 따른 양극화뿐 아니라 사회통합 저해, 나아가 초저출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정민수 외 2023, 2024). 거주지역에 따른 불평등이 세대를 이어 대물림되고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현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정부 등 공공의 관여는 불가피하다고 하겠다.

#### 비수도권에서 부모소득 계층 및 이주여부에 따른 소득 격차 확대 및 대물림 심화

[그림 30, 31] 비수도권 부모 소득순위별 자녀의 평균 소득백분위



자료: KLIPS

## 2. 정책적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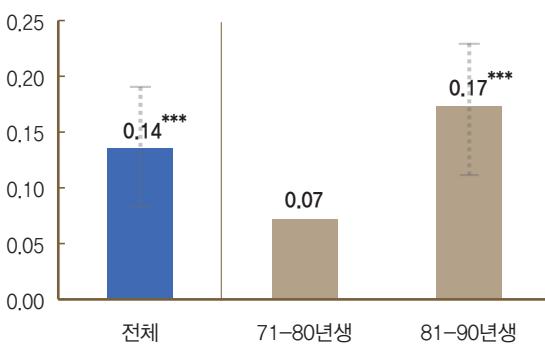
**43.** 출생 및 거주지역과 맞물려 경제력 대물림이 심화되는 구조를 완화하고 계층이동 사다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용이 될 재목이 강으로’ 가는 것을 돋는 이동성 강화와 더불어, 보다 근본적으로는 지역의 ‘작은 개천을 큰 강으로 틸바꿈’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교육시스템과 공공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Soria & Medina 2025, Chetty et al. 2014, Corak 2013). 저소득층 자녀들이 거주지역과 부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자신의 역량을 발전시키고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으려면 교육시스템이 취약계층을 충분히 배려할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들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Card et al. 2018).

- 44.** 먼저 비수도권 저소득층 자녀들의 수도권 상위대학 입학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입학생 선발시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을 반영하는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적극 도입해야 하겠다(정종우 등 2024). 선행연구에서 서울 및 강남지역 학생들이 서울소재 상위권 대학교에 진학할 확률은 학생의 잠재력이 예측하는 수준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비수도권 학생 중 상위권 대학교 진학비율을 인위적으로 상승시킬 필요가 있다. 다만 비수도권에서도 특히 저소득층 자녀들이 고소득층에 비해 상위권 대학교 입학이 더 어려움을 고려하여 지역별 비례선발제도 저소득층 자녀들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 45.** 둘째, 비수도권의 교육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지역별 비례선발은 짧은 시간 내에 비수도권의 lost Einstein(잃어버린 인재) 현상을 예방하고 세대간 계층 이동을 활발하게 하는 효과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비수도권의 우수한 학생들이 전부 서울로 진학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니와 비수도권의 인재유출(brain drain)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도 않다. 비수도권 학생들이 꼭 서울에 가지 않더라도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방안이며 그러면 각급 학교와 거점대학을 비롯한 지방의 교육 경쟁력이 서울 못지않은 수준으로 올라와야 한다.
- 46.** 서울과 지방 등 지역 간 교육 격차는 사교육뿐 아니라 공교육에서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한구 외 2024, 박주호 외 2019). 먼저 중등교육에서는 온라인매체를 통한 공교육 접근성 제고, 서울–지방 간 교육 정책 및 방법론 교류 확대, 비수도권 교사 역량 강화, 학교생활기록부에 부모나 교사의 역량이 반영될 여지 축소 등 교육의 공평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고등교육에서는 비수도권의 거점대학들이 서울 상위권 대학 못지 않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과감한 투자가 요구된다. 최근 정부에서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비수도권 거점대학들의 역량 제고를 위한 다방면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에서 소수의 대학이 특정 분야에서라도 진정한 ‘거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 전략을 고려해야 하겠다.
- 47.** 셋째, 근본적으로는 비수도권에서 계층상승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거점도시 중심 발전’과 같은 실효적인 균형발전 전략이 구체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정민수 등 2023, 2024). 저소득층 자녀들이 광역권 내에서 계층상승의 기회를 얻을 수 있으려면 결국 비수도권의 산업과 일자리의 경쟁력이 높아져야 한다. 그러나 향후 인구감소 추세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모든 지역의 균일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낮다. 따라서 비수도권에서 그나마 집적과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는 거점도시의 위상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지자체 간 유사한 전략과 경쟁으로 역량을 낭비하기보다 광역차원에서 지역별 특화와 효율적 분업을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최근 논의되고 있는 행정구역 통합 및 광역권 거버넌스 개편 등도 거점도시의 위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 〈참고 1〉

## 세대간 소득탄력성(IGE) 추정 결과 및 선행연구 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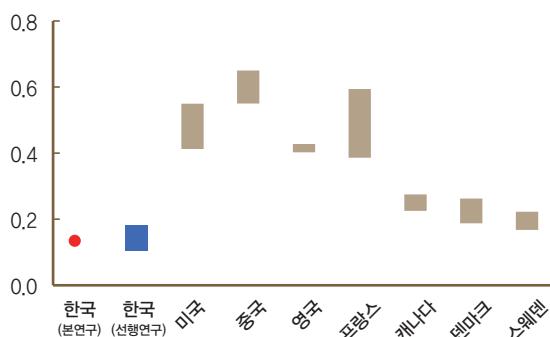
한국노동패널 자료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세대간 소득탄력성(IGE)은 0.14 수준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추정한 해외 주요국들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으로 소득탄력성을 추정한 연구에서도 우리나라의 IGE는 주요국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보고되었다(Muñoz & Weide 2025). 그러나 본고에서 추정한 우리나라의 세대간 소득백분위 및 자산백분위 기울기(RRS)는 해외 주요국들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물론 IGE와 RRS 모두 나라마다 측정 방법과 기준이 조금씩 달라 엄밀한 국제비교는 어렵다. 다만 명목소득 기반의 소득탄력성(IGE)의 왜곡 가능성이 큰 점을 감안하여 RRS의 국가별 대략적인 범위를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세대간 경제력 대물림이 다른 주요 국가들보다 덜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우리나라 세대간 소득탄력성<sup>1)(2)</sup>

주: 1) cohort1~4는 각각 1971~75, 76~80, 81~85, 86~90년 출생 자녀 코호트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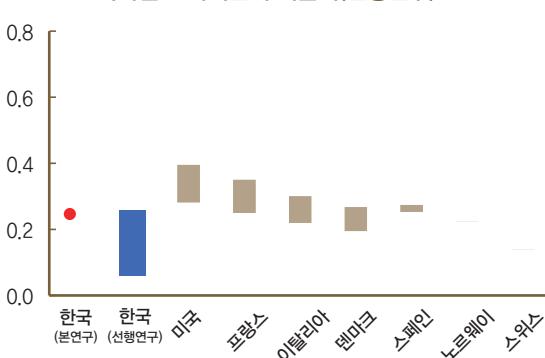
2) \*, \*\*, \*\*\*는 각각 10%, 5%, 1%에서 유의함을 의미

자료: KLIPS, 자체추정

국가별 세대간 소득탄력성 (선행연구)<sup>1)</sup>

주: 1) 각 막대는 참고문헌에서의 최저·최고값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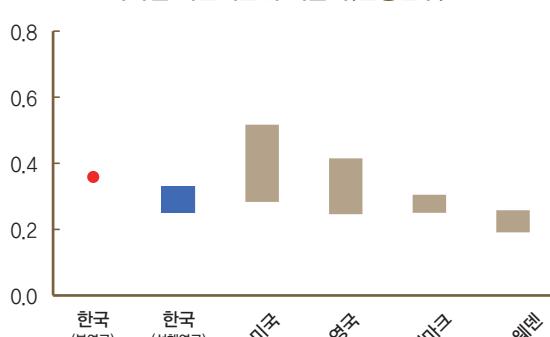
자료: Chetty et al.(2014), Kenedi(2023), Kim(2017), Ueda(2013) 등

국가별 소득백분위 기울기(선행연구)<sup>1)(2)</sup>

주: 1) 각 막대는 참고문헌에서의 최저·최고값을 나타냄

2) 일부 국가는 단일값으로 존재하여 직선으로 표시

자료: Boustan(2025), Chetty et al.(2014), Kenedi(2023) 등

국가별 자산백분위 기울기(선행연구)<sup>1)</sup>

주: 1) 각 막대는 참고문헌에서의 최저·최고값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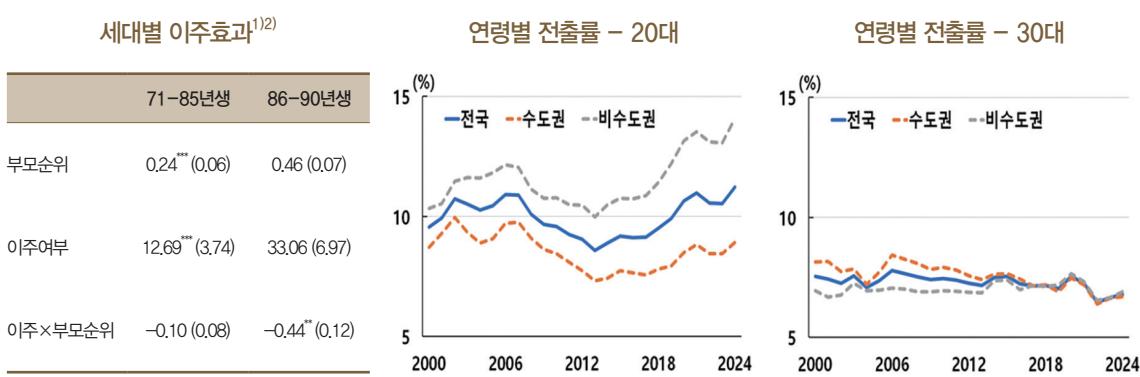
자료: Blanden(2023), Boserup(2017), Charles(2003) 등

## 〈참고 2〉

### 세대간 경제력 대물림 심화와 이주 행태 및 효과의 연관성

세대간 소득과 자산의 대물림이 심화하고 계층 이동은 둔화되는 이유는 매우 다양하겠으나, 여기서는 개인의 이주행태 또는 이주효과의 변화와 연관되었을 가능성은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그런 맥락에서 대물림 심화의 배경으로 이주효과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가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지역간 이주로 대물림이 완화되는 정도(이주효과)가 축소됨에 따라 대물림 심화를 초래했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그러한 이주효과에 큰 변화가 없어도 지역간 이주 자체가 줄어들었다면 이는 사회의 역동성 저하(대물림 심화)요인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 셋째, 앞의 두 가지 가설과 별개로 이주자 또는 비이주자 그룹 내에서 계층 이동이 둔화되고 그룹 간 격차는 확대된 점이 대물림 심화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다.

첫번째 가설부터 차례로 살펴보면, 먼저 지역간 이주가 대물림을 완화하는 이주효과는 축소되지 않았다.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이주 그룹에서 소득이 개선(이주여부 더미변수)되고 대물림은 완화되는(이주여부와 부모경제력 간 교차항) 현상은 최근 세대에서 오히려 확대되었다. 두번째 가설을 보았을 때 이주 자체가 줄어들면서 계층 이동성이 저하되었다고 판단하기도 힘들었다. 20대의 경우 2000년대에 비해 2010년대 중반까지, 30대의 경우 최근까지 인구대비 전출률(광역시도 기준)이 다소 하락하긴 했으나 그 폭이 크지 않았고 특히 20대는 2010년대 중반 이후 전출률이 과거(2000년대) 수준으로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다. 따라서 세번째 가설, 즉 본고에서 살펴본 것처럼 지역별 또는 이주여부별 그룹 내 대물림 심화와 그룹 간 격차 확대가 세대간 경제력 대물림이 강화된 현상과 가장 연관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설득력 있다.



주: 1) ( ) 내는 표준오차

2) \*, \*\*, \*\*\*는 각각 10%, 5%, 1%에서

유의함을 의미

자료: KLIPS, 자체추정

자료: 국가데이터처

자료: 국가데이터처

### 〈참고문헌〉

- 국가데이터처, “2025년 사회조사 결과(복지·사회참여·여가·소득과 소비·노동)”, 2025
- 김낙년, “가계조사의 행정자료에 의한 보정: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학회, 2020
- 박주호·백종면, “교육격차 실증연구의 체계적 분석”, 한국교육문제연구, 37(1), 2019
- 유한구 외, “지방분산과 균형발전을 통한 인구 저출산 대응 전략(교육부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24
- 이상호, “가계재정 관련 지표: 노동패널과 국민계정 및 가계금융·복지조사의 비교”, 한국고용정보원, 2018
- 정민수·김의정·이현서·홍성주·이동렬, “지역간 인구이동과 지역경제”, BOK 이슈노트 제2023-29호, 한국은행, 2023
- 정민수·이영호·유재성·김의정, “지역경제 성장요인 분석과 거점도시 중심 균형발전”, BOK 이슈노트 제2024-15호, 한국은행, 2024
- 정종우·이동원·김혜진,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방안”, BOK 이슈노트 제2024-26호, 한국은행, 2024
- 정희완·정민수·강보민·이영호·안지민, “온라인플랫폼 성장이 지역 자영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 방향”, BOK 이슈노트 제2025-19호, 한국은행, 2025
- Blanden, J., Intergenerational Home Ownership, *The Journal of Economic Inequality*, 2023
- Boserup, S. H., Kopczuk, W., & Kreiner, C. T., Intergenerational Wealth Formation Over the Life Cycle, *American Economic Review Papers & Proceedings*, Vol. 107, No. 5, 2017
- Boustan, L., Intergenerational Mobility of Immigrants in 15 Destination Countries, NBER Working Paper, 2025
- Britto, D., Fonseca, A., Pinotti, P., Sampaio, B., & Warwar, L., Intergenerational Mobility in the Land of Inequality, IZA Discussion Paper No. 15611, Institute of Labor Economics (IZA), 2022
- Card, D., Domnisoru, C., & Taylor, L.,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Human Capital: Evidence from the Golden Age of Upward Mobility, NBER Working Paper, 2018

- Charles, K., Hurst, E., The Correlation of Wealth across Generation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111, No. 6, 2003
- Chetty, R. & Hendren, N., The Impacts of Neighborhoods on Intergenerational Mobility,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33, No. 3, 2018
- Chetty, R., Hendren, N., Kline, P., & Saez, E., Where Is the Land of Opportunity? The Geography of Intergenerational Mobility in the United State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29, No. 4, 2014
- Corak, M., Income Inequality, Equality of Opportunity, and Intergenerational Mobility,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 27, No. 3, 2013
- Fagereng, A., Mogstad, M., & Rønning, M., Why Do Wealthy Parents Have Wealthy Childre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127, No. 6, 2019
- Ferreira F. & Brunori, P., Inherited Inequality, Meritocracy, and the Purpose of Economic Growth,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Working Paper, 2024
- Kenedi, G., Spatial Mobility and Economic Opportunity, OECD Working Paper, 2023
- Kenedi, G. & Sirugue, L., Intergenerational Mobility and Spatial Inequality,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2023
- Kim, J., Intergenerational Income Mobility in Korea, *Journal of Labour Economics*, 2017
- Muñoz, S. & Weide, R., Intergenerational Income Mobility around the World,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World Bank, 2025
- Soria, J. & Medina, O., Intergenerational Mobility in Spain: Geographic Analysis and Causal Neighborhood Effects, Working Paper, 2025
- Stuhler, J., A Review of Intergenerational Mobility and its Drivers,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2018
- Ueda, A., Intergenerational Mobility of Earnings in South Korea, *Journal of Asian Economics*, 2013

Copyright © BANK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 본 자료의 내용을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BOK 이슈노트 No. 2026-6에서 인용”하였다고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 내용에 대하여 질문 또는 의견이 있는 분은 커뮤니케이션국 커뮤니케이션기획팀(02-759-4759)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한국은행 홈페이지(<http://www.bok.or.kr>)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